



강북구의회
GYEO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5년 11월 09일
(월요일)

강북신문 6면

구본승 의원,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미아동, 송중동, 번3동)이 발의한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이 11월4일에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채택되었다.

구본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사회적 논의 과정이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유사·중복성의 정의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의 정비를 제기하고 있어 기존 수혜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 명확하다”라며,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저해하고 헌법 및 지방자치법 등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증진 사무를 축소하는 것으로 철회하



구본승 의원

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 이유를 말했다.

정비 추진방안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강북구의 경우 정비가 진행된다면 2016년도 강북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컴퓨터교실 운영비지원, 노숙인 보호, 시각장애인 일자리지원,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2억 3천만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구본승 의원은 “잘못된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반드시 철회하게 할 것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부신문 7면

강북구의회, ‘지자체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

구본승 의원, “복지 축소로 주민들 복지 후퇴 가져올 것” 강조



구본승 의원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구본승 강북구의회 행정보건위원장(미아, 송중, 번3동)이 발의한 『복지 축소·지방자치 훼손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회보장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사업 정비’ 철회 촉구 결의안』이 지난 4일 개최된 강북구의회 제194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구본승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사회보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은 사회적 논의 과정이 없이 정부가 자의적으로 정한 유사·중복성의 정의에 따라 중앙정부의 사업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의 정비를 제기하고 있어 기존 수혜를 받는 주민들에 대한 복지 후퇴를 가져올 것이 명확하다”며,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실현을 저해하고 헌법 및 지방자치

법 등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증진 사무를 축소하는 것으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비 추진방안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사회보장사업 5,891개 중 유사·중복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1,496개 사업에 대해 정비를 추진한다는 것. 강북구의 경우 정비가 진행된다면 ‘2016년도 강북구립장애인 보호작업장 컴퓨터교실 운영비지원, 노숙인 보호, 시각장애인 일자리지원,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2억 3천만 원 규모의 예산편성이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구본승 의원은 “잘못된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을 반드시 철회하게 할 것이며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